

# 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## 예술분야 융합 트렌드 및 지원방안 연구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12.

[http://www.kcti.re.kr/03\\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69&pagenum=2&groupnum=1](http://www.kcti.re.kr/03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69&pagenum=2&groupnum=1)

창의성을 촉진할 '예술과 과학 융합' 조직의 구축과 예술과 과학 융합형 전문 매개인력 양성

예술과 과학 융합의 소통의 장·공간 마련

- 배경
  -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에 의한 과학기술이 미술을 주도하기 시작했고,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아트가 본격적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의 흐름이 됨
- '예술과 과학 융합'을 위한 정책과제
  - 예술가와 과학기술자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
    -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 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참여자 확대 추진
  - 창의적 융합인력의 양성
    - 산업현장의 융합화를 선도할 신산업 융합 핵심인력 양성
  - 예술의 특성이 고려된 정책 방향 설정
  -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되지 않는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
  -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
- 예술과 과학 융합의 활성화 방안
  -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방안: 창의성을 촉진할 예술과 과학 융합 조직 구축과 예술과 과학 융합형 전문 매개인력 양성
  - 하드웨어적 활성화 방안: 예술과 과학 융합의 소통의 장·공간 마련과 예술과학융합포럼(안)마련

# 문화가 있는 삶, 문화융성 시대를 열다

---

KDI 나라경제 2014 년 3 월호 | 2014. 2. 28

[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\\_class\\_e7.jsp?period\\_type=5&pub\\_no=13543](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_class_e7.jsp?period_type=5&pub_no=13543)

**‘문화융성’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국정철학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언 소개**

-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함께하는 국정비전 ‘문화융성’에 답아
- 생활 속 문화예술, ‘사치’ 아닌 ‘잃어버린 일상의 회복’
- n 개의 지역엔 n 개의 문화가 ...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거는 기대 커
- 예술인 창작지원의 두 가지 길
- ‘문화’와 ‘기술’의 만남으로 신성장동력 창출한다
- 한류 재점화, 미국·중국시장과 유통플랫폼 개척에 답 있다
- 문화정책, 긴 안목으로 먼 미래를 보는 지혜를

#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

산업연구원 | ISUUE PAPER | 2013. 12. 31.
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8&state=view&idx=46211&sty=w&ord=10&ordt=1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state=view&idx=46211&sty=w&ord=10&ordt=1)

## 기술 및 지식 융합을 위하여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산업종사자들 간의 교류 지원 중소기업이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

- 배경

-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은 성숙화에 따른 시장포화와 기술 평준화에 따른 하드웨어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

- 제조업의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

1. 기술 및 지식 융합을 위한 지원

-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산업종사자들 간의 교류의 장 활성화
- 기존의 유사 분야 종사자들에게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역량강화 교육 실시
- 제조업의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 및 공감의 장 형성

2.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

- 중소기업이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
- 중소기업의 부족한 데이터 보안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

3.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교육 및 법·제도적 뒷받침

- 빅데이터 활용의 수월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·제도의 제정 및 개정
- 기존 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 제시
-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빅데이터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 실시

##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

한국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4.3.10

[http://www.keri.org/web/www/research\\_0401](http://www.keri.org/web/www/research_0401)

**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방안 마련과 지원책 확대,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을 덜어주는 대책, 가계의 소비불안 심리를 개선하여 평균소비성향 회복**

- 민간소비 부진과 국내 경제 침체
  -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(GDP) 증가율을 하회하는 소비부진이 지속
  -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3 년 55.7%에서 2013 년 50.6%로 감소
- 소비부진의 요인 분해
  - 가계소득 비중 하락: 2000~2012 년 가계소득은 GNI 연평균 증가율 6.9%보다 낮은 5.9% 증가
  - 가처분소득 비중 감소: 전체 가계소득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 83%에서 2013 년 81.1%까지 하락
  - 평균소비성향 하락: 가처분소득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000 년 80.6%에서 2013 년 73.4%까지 하락
- 시사점
  -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과 기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,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방안 마련과 지원책 확대
  -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 경감 대책과 연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층별로 분담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
  -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국내소비 지출 확대 유도
  - 노후불안 및 주거불안 개선, 일자리 안정성 제고 등 가계 소비불안 심리를 개선하여 평균소비성향 회복

## 가파른 고용 증가, 경기 못지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

LG 경제연구원 | ECONOMY 경제정보 | 2014. 3. 17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62&srctype=0&srchword=>

**최근의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경기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**

- 배경
  - 1, 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77만명 증가
  - 도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제조업 부문이 고용증가에 기여
  - 고령·여성계층의 노동시장 진입,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존 등도 고용증가에 기여
- 상용근로자, 신규유입 증가는 긍정적
  - 작년에 이어 임금근로자, 특히 상용근로자(고용계약 1년 이상)가 고용 증가세를 주도
  - 올해 임금근로자는 약 74만명 증가하면서 전체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3.7%로 작년 대비 1.1% 상승
- 고령층 자영업자 조정 여전히 진행 중
  - 올해 자영업자 조정이 다소 완화된 것이 최근 고용 증가에 기여
  - 50대 이상에서는 운수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부문이, 청년층(15~29세)에서는 교육서비스, 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, 여가관련서비스, 제조업 부문 등에서 자영업자수가 증가
- 여성고용은 50대,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집중
  - 1, 2월 여성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증가
  -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(8.7만)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(8.4만명)부문에 집중 증가
- 성장률을 웃도는 고용회복세 당분간 이어질 듯
  - 최근의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경기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
  -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고용회복세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일자리 나누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 존재

## OECD Well-Being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 현황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ISSUE&FOCUS | 2014. 3.

<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>

### 여성의 취업률 증진과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

- OECD Well-Being 지표 분석 결과
  - 건강과 교육 부문
    - OECD 회원국의 기대 수명은 2011 년 현재 여성(82.8 세)이 남성(77.3 세)보다 높으나, 건강상태는 여성(67.3%)이 남성(72.2%)보다 낮은 수준
  -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에서의 양성 격차
    - OECD 국가 여성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 격차는 점차 완화
    - 가사일과 자녀 돌봄 시간은 과거에 비해 남녀 간에 균등한 방향으로 변화
  - 사회생활에서의 양성 격차
    - 2011 년 현재 OECD 회원국의 여성 국회의원(27%)은 15 년 전(17%)에 비해 증가
    -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인 행복감에서 남성(5.9 점)이 여성(6.3 점)보다 더 낮게 나타남
- 시사점
  - 우리나라는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서 양성 격차가 두드러져 여성의 취업률 증진과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
  -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보다 많은 여성 리더 배출을 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이 필요
  - 양성 격차로 인한 문제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남성들의 웰빙 상태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
  - 빈곤율, 돌봄 노동,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성인지적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자료의 구축이 필요

##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Report | 2014. 2. 13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### 긍정적인 결혼관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,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맞춤식 저출산 정책설계,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

- 저출산의 늪
  -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 년 2.82 명에서 2013 년 1.18 명으로 하락
  - 평균 출산연령도 29 세로 고령출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-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
  - 결혼관: 20~30 대의 65.5%는 결혼에 긍정적이며,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'결혼,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'(42.1%) 등
  - 자녀관: 74.2%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며, 바람직한 자녀수는 2.11 명
  - 양육태도: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71.7%가 부부 및 친인척의 직접 양육을 선호하고, 가장 부담스러운 양육비용으로는 '사교육비'와 '보육서비스 비용'
  -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
    -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'아이맡길 곳이 없어서'로 기혼자의 절반이 이에 해당
    - 미혼자는 출산 후 복직, 직장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를 중시
    - 가장 선호하는 저출산정책은 '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'
- 시사점
  - 긍정적인 결혼관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맞춤형 저출산 정책설계
  - 보육시설의 양적·질적 향상을 통한 일가정양립의 지원과 함께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
  - 고령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령임산부를 '분만취약자'로 지정, 특별 관리체계를 도입
  -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과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설계
  - 입양 및 혼외출산 등의 대안적 출산의 양성화

# 도시 교통의 미래,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

LG 경제연구원 | 산업정보 | 2014. 3. 4

<http://www.lgeri.com/industry/general/article.asp?grouping=01030100&seq=235&srctype=0&srchword>

미래 교통 환경은 다양한 이동 수단, 서비스, 인프라가 긴밀히 연계되고,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·경쟁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변모

- 교통시스템의 진화 방향
  - 교통수단 분야는 자동차의 네트워킹/센싱 디바이스화, 도심 이동수단의 다양화, 비동력 이동수단의 재조명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
  - 교통 서비스 분야는 위치정보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보편화, 사물 인터넷, 빅 데이터 등이 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전망
  - 교통 인프라는 도로, 주차장, 신호체계 등 고전적 하드웨어에 CCTV 네트워크, 센서, 빅 데이터 등 다양한 IT 기술이 결합되는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며, 연료 공급, 유지/보수와 관련된 새로운 이동 지원 인프라 등도 나타날 전망
-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특징
  - 교통체제의 무게중심은 시스템에 의한 이동으로 옮겨갈 것이며, 새로운 운송 서비스의 등장, 다양한 정보 서비스의 부각으로 이동 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
  - 미래 교통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개개인들은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교통 체제로 진화할 전망
- 시사점
  - 교통 체제가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로 진화하는 것은 다양한 교통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
  - 이동 수단과 이동 인프라를 연결하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들의 활성화 예상
  - 교통 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, 이때 사업모델이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
  - 미래 교통 환경은 다양한 이동 수단, 서비스, 인프라가 긴밀히 연계되고,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·경쟁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변모할 것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 
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  
email: [urbandata@si.re.kr](mailto:urbandata@si.re.kr)  
phone: 02-2149-1022